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취지와 목차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2017년 6월 2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했고,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임을 주장함.

2017년 6월 19일 출범된 국정원 개혁위 및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치개입, 여론조작, 간첩조작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12월 21일부로 6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함.

이에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더 조사할 것을 정리하였음.

※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본 자료집에서는 제외함.

목차	2
1. 국정원 간부의 직권남용 및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4
2. 남북정담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6
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7
4.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	8
5. 보수단체 지원 사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및 안보DVD’ 조사 포함)	10
6.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13
7.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15
8. 언론보도 현안 관련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18
9. 좌익효수 사건	20
10.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22
11.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	24
12.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사찰 사건	27
13.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29
14.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사건	31
15.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	32

1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 의혹	34
17.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문건 의혹사건	35

1. 국정원 간부의 직권남용 및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1) 조사결과요지¹⁾

① '민간인, 공무원 사찰' 등 직권남용 관련

- 2016년 7월말,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청와대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의 개인동향과 감찰동향을 부하직원을 통해 수집한 후, 대응방안과 함께 수집된 정보를 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2차례 보고함.
- 2016년 6월말, 추 당시 국익정보국장은 소속 처장에게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 수집을 지시하고, 부하직원들이 수집한 첩보 등을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2016년 8월 12일 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함.
- 2016년 설 연휴 첫날, 추 당시 국익정보국장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동향보고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다음날 부하직원으로부터 동향보고서를 보고받음
- 2016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세평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세종시 근무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하고, 부하직원은 부정적인 평판 위주의 세평 보고서를 추 당시 국장에게 보고함.

② '최순실 관련 비선보고 및 인사전횡 의혹' 관련

- 추명호 국익정보국장 부임(2014.8) 이후 최순실 등 국정농단 단초가 되는 첩보가 다수 수집되었으나,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수집 지시도, 원장 등 지휘부 보고도 하지 않음. 도리어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지방전출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
- 최순실 관련 보고서를 추 전 국장 재임기간동안 작성한 바 없고, '최순실 전담팀'도 운영된 바 없음.
- 2016년 2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추 당시 국장을 국내정보 관할하는 국정원 2차장에 추천하고, 추 전 국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을 2회 이상(2015.6, 2015.12) 접촉한 사실있으나, 두 사람에게 비선 보고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음.

▶ 조치사항

- 민간인 및 공무원 사찰 지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2) 한계와 과제

¹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6

-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상당수의 최순실 및 국정농단 관련 첩보수집을 묵살하거나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첩보수집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배경 또는 동기에 대해 더 규명되어야 하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추 전 국장이 최순실 관련 첩보 또는 묵살 사실 등을 안봉근 또는 우병우 등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함.
- 2016년 11월 21일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이 원장은 “지난주부터 감찰조사 중이므로 감찰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팩트(사실)와 의혹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감찰실에서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후 감찰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음. 당시 감찰 결과 중에서 적폐청산TF가 조사·발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할 것임.

2.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1) 조사결과 요약²

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치권 유출의 건

- 2009년 5월 4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의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함. 이를 5월 7일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국가안보망을 이용),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한 외교안보수석(복사방해용지 출력 후 인편을 이용)에게 각각 제출함.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 전달함.
-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선거 부산지역 지원 유세에서 언급한 내용은, 위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함. 아울러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게재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의 문건은, 2009년 5월 7일 외교안보수석실에 배포한 보고서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당시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②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불법공개의 건

- 2013년 6월 24일 오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결정하고, 같은 날 정오경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던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들(여당소속)에게 전격 공개함.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논의하는 등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접 접촉이나 유선 전화를 통한 사전조율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조치사항

- 남재준 당시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비밀엄수)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2009년 5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의 대화록 발췌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 등에게 보고된 것이, 순전히 원세훈 당시 원장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 등의 요청과 협의에 따른 것인지 밝혀야 함.

²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6.

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1) 조사결과 요약³⁾

① 노 전 대통령 수사관여 여부

-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4월 17일에 '동정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 4월 20일에 '검찰측에 성역없는 수사를 지속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동정 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국내정보부서의 보고를 승인함.
- 2009년 4월 21일 원세훈 당시 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만나 원세훈 원장의 의중이었던 '노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함. 이 때 명품시계 수수 건 등은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함.

② '명품시계 수수' 및 '논두렁 투기' 언론 플레이 여부

- 2009년 4월 21일 원세훈 당시 원장의 측근이었던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중수부장을 만나 '명품시계 수수 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언급을 한 것 외에는,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③ 그 외 언론관여 여부

- 원세훈 당시 원장의 방침에 따라,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에게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 적극 보도를 요청함. KBS담당 정보관(I/O)는 당시 보도국장(고대영)을 상대로 '국정원의 수사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 것을 협조요청하며 현금 200만원을 사용함.

▶ 조치사항

- KBS보도국장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수사개입 의혹을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 가능성 차단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SBS사장에게 수사상황 적극 보도를 요청한 것외에 언론사를 상대로 한 행위들이 더 밝혀져야 하고, 심리전단을 통한 사이버상의 여론왜곡 행위 여부도 규명되어야 함.

³⁾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23.

4.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

1) 조사결과 요약⁴

① 2013년 5월에 진선미 의원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제하의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임이 확인됨.

- <서울시장의左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은, 2011년 11월 경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박 시장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국내정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한 후 심리전단 등에 배포하여 실행에 옮겨짐. 이후 심리전단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활용해 가두집회, 비판광고 게재 등을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서울시장 불신임 이슈청원'을 개설하기도 함
- 이외에도 2009년 9월경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사찰의혹을 제기한 것 등과 관련하여, 심리전단이 2009년 9월 18일~30일 사이에, 포털 다음 '아고라' 등에서 여론왜곡 글들을 게시하고, 박 변호사 비판 웹툰 등을 제작확산시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규탄' 시국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함. 2010년 9월에도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국정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법원 판결 규탄 및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비판활동을 포털 다음 '아고라'를 비롯해, 트위터 등에서 전개하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도 법원 판결 비판글을 게시함.
-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문건 역시, 2011년 5월 경 원세훈 당시 원장 등의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후, 심리전단이 보수단체 등을 활용한 맞대응 시위, 시국광고 게재 등으로 실행하였음.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등 박 시장 탄압활동에서, 국정원이 어버이연합등 보수단체로 하여금 가두집회, 1인시위, 비판광고 등을 게재하게 하고 인터넷매체에 논평과 칼럼 등이 게재되게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동원실태도 더 밝혀야 함.

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09.11.

-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문건 작성후 맞대응 시위 개최, 광고 게재 등을 보수극우단체에게 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등 자금을 지원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동원실태도 더 밝혀야 함.

5. 보수단체 지원 사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및 안보DVD' 조사 포함)

1) 조사결과 요지

①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급 주선(매칭) 사업⁵

- 2009년 4월 14일에 청와대(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현진권,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 출신))로부터, 5개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을 차단하고 27곳의 보수단체와 12개 인터넷매체 쪽으로 기부와 광고를 지원할 것을 요청받은 후, 보수단체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정보부서를 통해 공기업의 보수단체 지원을 추진함.
- 2010년에는 기존 공기업에서 전경련과 대기업으로 확대하였고, 18개 보수단체와 17개 기업간 약 32억여 원 지원이 추진됨(2010년 10월, <보수단체 매칭상황 점검보고> 보고서)
- 2011년에는 각각 공기업을 제외하고 '43개 보수단체(인터넷매체 7개 포함)'와 전경련을 비롯한 18개 기업간 매칭-36억여 원을 지원했고(2011년 12월 <보수단체-기업체 추가 매칭 추진결과> 보고서), 2012년에는 41개 보수단체와 16개 인터넷매체에 대한 50억여 원의 규모의 지원을 추진함.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②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실체 및 국정원 관여⁶

- 2010년 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하여, 2013년 6월에 '단계적 청산방안'이 남재준 당시 원장에게 보고된 후 2014년 1월 청산 때까지 국정원 예산 63억여 원을 투입해 국정원 외곽단체로 운영함.
- 표준교안 책자 제작 및 우수강사 선별, 강의실적 보고 등을 통해 국발협을 통한 각급 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을 면밀히 관리하였으며, 국발협 각 지회장 등 관계자들을 활용하여 정부비판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 유포, 국정운영 우호 여론조성 등 정치개입활동을 병행하고 지회장 명의로 지역신문 등에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토록 하였음.
-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발협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정원은 국방부에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거나 국가보훈처에는 정부 예산 지원없이 각계 후원금으로만 운영된다고 거짓 답변하도록 두 기관에 요구함.

⁵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23.

⁶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30.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과 박승춘 전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함(국정원개혁위).

③ 국가보훈처 배포 안보교육 DVD 제작 개입⁷

- 2010년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안보교육 강화'를 지시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도 2011년을 안보교육 강화의 해로 설정하는 가운데, 이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이 2011년 10월말 ~ 11월 초에 심리전단에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안보교육용 DVD 제작과 지원을 지시함.
- 2011년 11월 7일 심리전단이 DVD 샘플을 제작한데 이어 2011년 12월 15일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이름으로 총 1,000개 세트(세트당 DVD 11장)을 제작완료해 국가보훈처(나라사랑교육과)에 제공함.

▶ 조치사항

- 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받았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통보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2009년부터 보수단체와 기업체 지원 매칭사업이 벌어진 배경에는 '공기업의 좌파단체 지원 차단'을 주문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요청이 있었음.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던 공-사기업의 민간단체 지원과 업무협력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청와대와 국정원간의 협의 및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 아름다운재단이나 희망제작소에 대한 하나은행 등 기업의 업무협력 중단 국정원 개입의혹, 환경영화제에 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지원중단 국정원 개입의혹 등을 비롯한 정상적인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함.
- 기업 등을 강요해 보수단체와 인터넷매체를 지원하게끔 한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를 요청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현진권) 등도 직권남용 혐의 교사 또는 공범으로 수사해야 함.
- 국발협 설립 및 운영에 국정원예산 63억원 투입 과정의 법적 절차 위반 또는 예산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더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함.
- 2012년 국감에서 국방부 및 보훈처에게 부당한 지시와 허위통보 지시를 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

⁷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30.

-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용 DVD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국정원 등에서 교육교재로 사용한, 2009년 4월에 국정원 직원이 집필하고 '현대사상연구회'라는 조직에서 발행한 단행본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기획 또는 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함.

6.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1) 조사결과 요지

①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⁸

- 2009년 2월 취임 이후 원세훈 당시 원장이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내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압박활동을 지시함.
- 청와대에서도 2009년 9월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종합 및 좌편향 방송PD 주요 제작활동 실태'를 비롯해 2011년 6월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이진행하는 TV 및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 실태' 파악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관리 방안> 등을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함.
- 국정원은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팀장 : 기조실장)하여,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및 소속상 대상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으로 퇴출을 압박함. 심리전단도 온라인상에서 특정 연예인 이미지 실추 유도 심리전을 전개함.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②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⁹

- 2013년 8월 16일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실태>, 10월 2일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재확산 시도 차단 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함.
- 2014년 1월 27일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의견> 보고서, 2월 20일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체계 보완 필요 여론>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함.
- 2014년 3월 19일에 15개 단체, 249명의 인물의 명단과 함께 대응전략을 제시한 <문예계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사항> 제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함.
- 2014년 2월 22일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련 배제해야 할 인물인지 파악을 위해 8,500여 명의 인물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은 후, 이중 348명을 '문제인물'로 선별하여 통보하였음.

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09.11.

⁹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30.

- 2013년 8월 27일 CJ그룹(부회장 이미경) 계열사 CJ E&M이 좌성향 영향 등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CJ의 좌편향 문화사업 확장 및 인물 영입 여론> 제하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함.

▶ 조치사항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판 또는 수사중인만큼, 관련 자료를 검찰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및 청와대 각 수석실 등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들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함(단순히 VIP일일보고, BH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하였음 이라고만 발표됨).
-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구성된 <좌파연예인대응T/F>가 언제까지 활동하다가 해소되었는지를 비롯해 문화연예계내 정부비판세력 퇴출 활동이 이명박 정부의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함.
- 좌파연예인대응TF 등이 실시하기로 한 활동(특정인 배제 유도 등)의 구체적 결과를 비롯해 협조자들이 누구였는지도 규명되어야 함.
- 블랙리스트 관련 최초 보고서 작성이 2013년 8월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계기로 또는 누구의 지시로(남재준 원장의 지시였는지, 또는 청와대 등 외부의 지시와 요청이 있었는지 등) 2013년 8월자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가 밝혀야 함.
- 2013년 8월자 보고서를 비롯해, 2014년 1월 27일자, 2월 20일자, 3월 19일자 보고서 등 보고서 작성 부서와 책임자 및 관여자, 보고를 받은 청와대의 부서와 인물이 누구인지, 특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는지 밝혀야 함.
- CJ에 대한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7일 첫 청와대 제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또한 무엇을 계기로 또는 누구의 지시로 작성되었는지 밝혀야 함.
- 2013년 8월 27일 CJ 관련 청와대 제출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 부서와 책임자, 보고받은 청와대 부서와 인물, 특히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는지 밝혀야 함.
- CJ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응방안 건의 후, 국정원은 아무런 실행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는지 규명해야 함.

7.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1) 조사결과 요약¹⁰

①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여부 및 운영, 관리 개입 관계

- 국정원 직원들의 공제회인 양우회가 세월호의 법적 소유자인 '청해진해운' 관련 상장, 비상장 주식 및 선박펀드 등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해진해운'이 자체적으로 세월호 매입, 증개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보하였음.
- 국토해양부로부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합동보안측정 요청을 받고 국정원이 2013.2.26~27.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지적한 4개 사항에 대해 청해진해운 양대홍 사무장이 선사 자체 및 합동점검에 참가한 인천항만청 등 5개 유관기관들이 지적한 내용을 추가해 '국정원 지적사항(100개)'라고 저장 보관한 것으로 파악됨
- 청해진해운 자체 판단으로 테러 및 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대처용으로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운항관리규정 작성과 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② 국정원의 세월호 사고 인지 시점 및 보고경로 관련 의혹

- 국정원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09:19에 YTN 뉴스속보를 통해 최초 인지, 09:20에 지휘부와 원내 부서에 전파함. 국정원 인천지부 직원이 청해진해운 관리부장으로부터 두 차례(09:33, 09:38) 언론보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였으나,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연락받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음.

③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등

- 당시 심리전단은 세월호 관련 북한의 유언비언 확산 및 남남갈등 조장 대응차원에서 '뉴스파인더' 등 소규모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허위왜곡 선전을 정정'하는 사이버 대응 활동을 수행하였고, '유가족 편취' 및 '특별법 반대' 등 활동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 국내정보부서에서 2014.5~2015.7 사이에 △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 △ 각계 세월호 관련 여론을 파악해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함. 청와대가 한국대학생포럼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맞대응 활동을 독려하고 전경련을 통해 지원한 내용을 입수해 지휘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국내부서에, <한국대학생포럼>의 세월호 추모 '청춘열차' 비판칼럼 기고 및 온라인 확산,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관련 집회 및 현수막 게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의 기자회견 등 활동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함.

¹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8.

- 국정원 정보담당관이 단식중인 유가족 김영오의 건강상태 등 정보를 얻기 활동하였으나, '사찰'수준은 아니었으며, 국정원 정보담당관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조사진행상황을 수집한 바 있으나 조사방해 및 개입내용은 발견되지 않음.
- 해킹프로그램(RCS) 활용 민간인 사찰여부 조사결과 RCS 점거 대상 내국인 및 서버저장 국내휴대전화번호에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았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선적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또한 사고 전날(2014.4.15) 세월호 출항 허가에 국정원이 관여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함.

▶ 조치사항

- 국정원이 보수단체 활동에 관여한 정황은 법규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범위 이탈로 판단되어, 다른 조사사건과 함께 징계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① 세월호 관련 보수단체 지원 정황

- '2014.5~2015.7월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 △各界 세월호 관련 여론을 파악해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하는 한편 청와대가 한국대학생포럼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맞대응 활동을 독려하고 전경련을 통해 지원한 내용을 입수해 지휘부에 보고'한 부서와 보고라인,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구됨. 밝혀진 사실에 대한 추가 조치, 처벌이나 징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함.
- 국정원 국내부서가 개입한 「한국대학생포럼」의 세월호 추모 '청춘열차' 비판칼럼 기고(2015.2.4, 뉴데일리) 및 온라인 확산,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악용세력 규탄 집회 및 현수막 게첩(2015.4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의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계기 규탄 기자회견(2015.3.29, 서울시청앞) 및 세월호 교재 퇴출 촉구 기자회견(2016.4.11.)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구됨. 밝혀진 사실에 대한 추가 조치, 처벌이나 징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함.

② 세월호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황 등을 통해 '세월호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③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여부 및 운영·관리 개입 등

-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청해진해운 소액투자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국정원 전현직 간부, 양우회 관계자 등 실명, 비실명 투자, 계좌 추적 등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함.

- 산업은행 대출 과정에 국정원이나 정부 기관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국정원에 보고하는 국가보호장비 지정 선박에 대한 정보공개가 요구됨.
- 국가보호장비에 대한 보고를 받는 국정원 지휘라인과 당시 보고, 지시자, 보고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④ 국정원의 세월호 사고 인지시점 및 보고 경로

- 해경 상황실 녹취록, 국정조사 답변, 언론보도가 다른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세월호 참사당일 실제 국정원 상황 보고, 인지 라인과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⑤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세월호 적재·운송 및 출항 관여 여부

-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철근 이송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국정원, 정보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보고상황과 보고사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⑥ 세월호 관련 사이버심리전 활동 여부

- 세월호 관련 심리전단 활동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결론과 관련 조사 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공개가 요구됨. 광범위하게 이뤄진 세월호 유가족 명예훼손, 특조위 공격 댓글 활동까지 조사가 포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⑦ 세월호 관련 단체 및 유가족, 특조위 대상 사찰, 방해 의혹

- 조사대상자, 당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세월호 1기 특조위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할 필요가 있음.
- 특조위 조사 진행상황을 수집, 보고한 보고자, 보고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⑧ 세월호 참사이후 유가족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 RCS 사용 의혹은, 조사, 수사의 가장 기본인 피해당사자의 조사를 하지 않았음. 조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8. 언론보도 현안 관련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¹⁾

①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 중 8건의 문건이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됨.

- <10·26 재보선 선거사법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은, 원세훈 당시 원장이 2011년 11월 3일 '선거사법 최단 시간내 처리' 지시 후 11월 4일 작성되어 11월 7일에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으로, 야당 후보자 및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과 처벌을 검찰과 경찰 지휘부에 독려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음.
-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내용을 2011년 10월 4일 전달받고 10월 6일~11월 4일 기간중에 작성하여 11월 8일에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으로, 재보선 선거 직후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분석과 향후 총선·대선에서의 여당 후보 당선에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 등을 제안한 것임. 이 문건의 청와대 보고 이후인 2011년 11월 18일에 원세훈 당시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SNS 대응팀 강화를 지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심리전단에 1개팀(35명)을 증원하였음.
- <2040세대의 對정부 불만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박원순 당선) 이후, 11월 7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으로, 여당 후보의 낙선 원인 분석과 특정정당의 총·대선 승리를 위한 대응책을 제안한 것임. 한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2011년 11월 2일~4일에 '세대별 현안인식' 내용의 여론조사를 외부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정원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음.
-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회복 도모> 문건은, 2011년 9월에 '10.26. 보선 정보수요 대처 계획'을 기획하여 정보담당관들에게 관련 첩보를 수집토록 한 후, 10월 6일에 작성해 10월 7일에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임. 서울 시민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도 등을 담은 보고서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작성되었음.
- <손학규 대표,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 인물영입에 주력>(2011.8.26 작성, 다음 날 청와대 보고), <손학규 대표측, '안철수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2011.9.6 작성, 다음 날 청와대 보고), <민주당, 조선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2011.10.7 작성, 다음 날 청와대 보고),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2011.10.29 작성, 다음 날 청와대 보고) 문건도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것임.

¹¹⁾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08.03.

2) 한계와 과제

- 야당 후보자 등에 대한 표적 수사 독려의 구체적 실행내역을 추가로 밝혀야 하고,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도 있었는지 밝혀야 함.
-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작성된 <서울민심 관리이슈...> 문건 보고 후, 국정원이 실행에 옮긴 것은 없는지도 밝혀야 함.
- 선거대책 마련을 위한 용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국고손실 등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선거대책 및 선거운동방법 제안과 관련하여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야 함.
- 2011년 11월 3일 원세훈 전 원장이 정무직 회의에서 ‘선거사범 최단시간내 처리’ 지시 이후 첩보를 종합해 11월 4일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문건이 작성되어 11월 7일 청와대에 보고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검경 지휘부의 수사과 처벌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요구됨.

9. 좌익호수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²

① 좌익호수 활동과 국정원 조직과의 연관성

- 닉네임 '좌익호수'로 활동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유 모씨의 경우 상부 지시 등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함.

② <국정원의 '좌익호수'와 무관' 허위 보도자료 배포 경위>

- 2013년 6월부터 '좌익호수' 아이디를 사용한 직원 존재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심리전단 소속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만 조사하고 유 모씨가 속한 대공수사국 등 타 부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따라 허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음.

③ <좌익호수 비호 및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 압력행사 여부>

- 유 모씨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음.

④ <'좌익호수' 징계 고의 지연 여부>

- 검찰로부터 수사종료를 통보받은 날(2015년 12월 1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년 1월 1일이 징계시효 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종료 후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1심 선고(2016년 4월 1일) 후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2016년 5월 31일 해임을 의결함. 징계시효 만료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은 확인됨.

▶ 조치사항

- '좌익호수' 유 모씨에 대한 재판에 참고하도록 이번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할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좌익호수' 유 모씨 외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국정원 직원 3명의 인터넷게시물 작성 여부와 그들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함. 그들이 모두 대공수사국 소속인지 그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함.

¹²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6.

- 유 모씨에 대한 징계시효 만료때까지 징계절차를 지연한 국정원 감찰실 관계자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함.

10.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³

① 국정원 지휘부의 '혼외자 첩보 검증' 지시 여부

- 2013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신상정보를 불법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 모씨의 배후에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
- 다만 송 모씨가 불법수집에 착수한 날(2013년 6월 7일)에, 국정원 모 간부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학생의 신상정보 등 첩보를 작성한 후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이를 2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었음. 그러나 이들 보고라인(송 모씨의 직속 처장과, 상급자인 국내정보 부서장 및 2차장)을 조사했으나, 송 모씨에 대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함.

② 청와대 보고, 조선일보 요청 등을 통한 채동욱 퇴진 유도 여부

-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사실 또는 청와대의 보고요청 사실, 국정원 작성 자료의 조선일보 유출 증거 또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함.

③ 송 직원에 대한 감찰조사, 징계 미실시 사유

-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를 미루다, 법원의 2심 유죄 판결(2016년 1월 7일) 선고 후에도 감찰조사 등 징계절차 착수하지 않았음. 2016년 6월 7일부터는 징계시효(3년)은 도과하였음.

▶ 조치사항

- 송 직원의 불법행위 착수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송 직원 불법행위 전후 지휘계통 간부들의 특이동향(인물 검색 및 통화 빈번) 등을 감안할 때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만큼,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해 수사의뢰 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¹³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23.

- 국정원 조사에서 새로이 확인된 '국정원 모 간부'가 채동욱 관련 첩보를 작성후 국내정보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이를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첩보가 수집되었고, 2차장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더 밝혀져야 함.
- 국정원에서 첩보수집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청와대(민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에서도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만큼 두 조직간의 공모나 정보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더 밝혀져야 함.
- 국정원 직원 송 모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게을리하여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업무태만에 대해 수사 또는 징계조치를 취해야 함.

11.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⁴

①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에 대한 가혹행위 및 회유, 허위진술 유도 여부

- 신문과정에서 PET병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고압적 자세가 있었음. 다만 고압적 자세 외 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
- 수사국 담당 수사관이 2012년 12월 13일에 회유계획을 세워 수사국장에게 승인받았고 이후 수시 반복되던 유가려의 진술이 혐의 시인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리되는 등 회유가 실행된 정황이 확인됨.

② '땃글사건' 국면 전환 목적 유우성에 대한 기획수사 여부

-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이미 실시했고, 2012년 12월 11일 '땃글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년 12월 3일 당시 수사국장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이 12월 4일인 점을 볼 때 '땃글사건' 국면 전환용 수사'의 근거가 미약함.

③ 무리한 수사 및 선별적 증거 제출 등 수사 적절성 여부

- 2012년 12월 6일에 합신센터로부터 유우성에 대한 압수 및 체포영장 신청 보류를 건의받았고 수사국 실무진이 강제수사 진행을 반대했음에도 수사국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시킴.
- 사진자료 증거분석제출과 관련하여 고의적 은폐, 누락으로 판단할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GPS정보 지식부족과 증거분석 미흡 등 부실수사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음.

④ 조직적 증거조작 여부

- 1심 무죄 판결후 남재준 당시 원장이 '항소심에서 철저히 대응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에 참여했던 중국 전문가 김 아무개 과장이 '출입경 기록' 등 문건을 위조하고 위조사실 은폐를 위한 거짓말을 수시 자행하였음에도, 수사팀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입수 자료를 검증하지 않아 위조정황 포착에 실패함.
-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 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함.

▶ 조치사항

¹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8.

- 유가려 씨가 대한민국 및 신문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과 회유진술유도 등 수사권 남용 및 부실수사에 대해 재발방지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① 피해당사자에 대한 조사 부재

- 증거조작과 진술조작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유가려에 대한 피해사실 청취 면담 자체가 없었음.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고, 국정원 수사권의 폐해를 극명하게 확인시켜준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았음.

② 국정원이 관할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침해 과정에 대한 조사 부재

- 이번 간첩조작 사건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외부와 차단된 구금시설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관행이 만들어 낸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임. 여동생이 친오빠를 근거도 없이 간첩이 맞다고 진술하게 할 정도였다면 이번 적폐청산TF에서 이른바 합신센터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검토, 조사를 했어야 함.

③ 증인매수 등에 대한 조사 부재

- 2014년 11월 한겨레는 '유우성씨가 보위부 남파 간첩이라고 허위진술했고 유우성이 간첩이 맞다고 증언하러 재판정에 출석한 대가로 국정원에서 돈도 받았다'는 어느 탈북자의 양심선언이 보도되었음.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음.

④ 중국 사진 위치 조작에 대한 조사내용의 부실

-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북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GPS정보 지식부족과 증거분석 미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국정원 대공수사국 내에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들 상당수가 있고 이들이 수사에 결합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기재해 놓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⑤ 조직적 증거조작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실패

-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신문과정, 국정원과 검찰 수사과정, 공소제기 후 증거보전절차 및 인신보호구제절차,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태도는 끝까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음. 회유와 협박으로 유가려의 허위진술 강제,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법정 증언 조직 및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 지급, 중국 관련 문서 위조 등 모든 절차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최근 추가적인 조사사건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절차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필요함.

12.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사찰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⁵

① 헌법재판소 사찰 여부

- 2017년 1월부터 헌재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헌재 담당관)이 보직 후 탄핵 결정까지 헌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으며, 헌재 관계자로부터 탄핵 결정시까지 재판소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실제 헌재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음.

② 대법원장 및 춘천지법원장 사찰 여부

- 경찰청 담당 수집관이 입수보고한 대법원장 관련 동향 첩보를 대법원 담당 수집관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서(<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로 생산하여 2014년 2월 6일에 청와대 배포함. 그 외 대법원 담당 수집관이 작성한 대법원관련 첩보 전량을 확인한 결과, 통상적인 여론, 동향, 인사검증 사항임.
- 강원지부 법원 담당 수집관이 작성한 첩보를 취합하여 보고서(<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로 생산하여, 2014년 2월 6일에 청와대에 배포함. 그 외 강원지부 법원 담당 수집관이 작성한 춘천지법 관련 첩보도 통상적인 여론, 동향, 인사검증 사항임.

③ 우리법연구회 대상 견제 활동 여부

-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위해 활동함.
- 구체적으로 2009년 8월 심리전단은 '자유주의진보연합'과 협조하여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과 활동내용을 월간조선 등 언론사에 전달하고,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등을 활용하여 신문광고, 집회, 성명서 발표 등의 방법으로 '우리법연구회'를 견제하는 활동을 전개함.

▶ 조치사항

-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 자료를 검찰에 전달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¹⁵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30.

- 우리법연구회 견제를 위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을 활용해 광고, 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수극우단체들에게 자금 등을 지원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함.
- 대법원장 및 춘천지법원장 사찰 관련 보고서가 2014년 2월에 청와대에 보고되었는데, 이 보고서를 받은 이는 청와대 어느 부서(예를들어 민정수석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 대법원장 및 춘천지법원장 동향보고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2014.2.7, 2014.2.10)되고 청와대에 배포된 계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움. 대법원장 관련 보고는 작성 시점을 전후로 언론이 취재중인 사안이어서 첩보보고하였다고 하지만, 춘천지법원장의 경우는 특별히 보고되어야 할 계기가 없었음. 따라서 두 동향보고가 일상적인 대한 동향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의 정보수집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밝힐 필요있음.
- 문제의 두 보고서(대법원장, 춘천지법원장)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전임자나 후임자들이 작성하거나 그들의 첩보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배포 또는 보고한 사법부 관련 보고서들 중에도 '통상적인 수준의 여론과 동향, 인사검증' 외 사법부 독립성을 저해하는 자료가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13.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⁶

① RCS 도입 경위 및 현황

- 2011년에 도입을 결정하고, 2012년 1월과 7월에 각각 10회선씩 총 20회선을 한국총판인 <나나테크>의 중개로 이탈리아 <Hacking Team>社로부터 구매함.
- RCS 도입 및 운영과정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② 민간인 불법 사찰 여부

- RCS를 통해 테러·국제범죄 등과 연계된 총 213명의 PC와 휴대폰을 점거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됨.
- RCS 점거 대상자 중에 내국인은 4명이 있지만, 해외 거주중인 북한 연계 혐의(2명), 해외체류중인 테러 연계 혐의(1명), 국내 거주중인 국제범죄 연계 혐의(1명)으로 사찰 목적의 내국인 점거는 없었음.
- RCS 점거 대상자중에 해외교포 3명이 있지만, 3명 모두 북한 연계 혐의 수집을 위해 점검했던 것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점거 1명은 국제테러단체 연계혐의가 있는 불법체류자이었음(점거시도했으나 실패함).
- RCS 서버에서 확인된 국내 휴대폰 번호 21개는, RCS 성능 검증 등 시험 목적으로 국정원 소유 또는 직원 또는 직원 가족 명의의 14개와 국내 거주 중인 한국국적 귀화자(1명)와 외국 국적자(6명)의 전화번호 7개로, 사찰성 점거는 없었음.
- RCS 서버 에서 국내 IP가 총 139개 확인되었는데, 102개는 RCS 성능 시험과정 등에서 나타난 IP이고, 37개는 점거된 대상자가 국내 체류중이거나 점거된 이메일 계정을 국내에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IP임.

③ RCS 운용 실무자 故 임승교 과장 사망 경위

- 경찰의 번사사건 기록, 사망 전 행적, 휴대폰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했을 때, '자살'로 판단됨.
- 임 과장은 RCS 점거 대상자중 '내국인 사찰은 없음'이라고 상부에 보고(2015년 7월 14일)한 뒤 RCS 서버 로그기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내 IP 등이 발견되어 7월 17일 01:40~03:54에 임의로 국내 IP 87개를 삭제하고 대상 명칭 7명도 변경함. 지휘부의 현장공개 방침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내국인과 국내 IP 소명이 어려워지자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해버리고 로그기록 전체 제공에 부담을 느껴 심적 중압감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¹⁶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23.

2) 한계와 과제

① RCS를 이용해 총 213명의 PC 및 휴대폰을 점거하였으며, 내국인 감시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나, 발표 내용에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총 213명 중 내국인은 4명, 해외교포(외국국적) 3명, 국내체류 외국인 1명이라면, 나머지 205명은 해외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휴대폰 번호가 21개인 이유는 무엇인지? 국내 휴대폰 번호 21개 중 국내 거주중인 한국국적 귀화자는 1명인데, 이는 점거한 대상 213명 중 내국인 4명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럼 나머지 내국인 3명은 PC를 점거한 것인지, 국내 휴대폰 번호 21개 중 외국 국적자가 6명인데, RCS 점거 대상인 국내체류 외국인은 1인인 것으로 비추어볼 때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 휴대폰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국내 IP 37개가 '점거된 대상자가 국내 체류 중이거나 점거된 이메일 계정을 국내에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출현'했다고 하는데,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자주 방문을 했기 때문인 것인지 등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

② RCS를 통한 국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진 이유는 국정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일 RCS가 주로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되지 않음.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 등에 악성코드 요청한 이유
- 메르스 정보 링크에 악성코드 요청한 이유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에 악성코드 요청한 이유
-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
- 카카오톡 해킹에 대해 문의한 이유
- 삼성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에 대한 해킹을 의뢰한 이유
- 국내 백신 프로그램인 V3의 우회를 요구한 이유

③ RCS 이용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발표 내용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음. RCS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적폐청산 TF는 RCS 이용 과정에서 감청 영장이 있었는지, 혹은 다른 적법한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함.

④ RCS를 은밀히 이용한 것은 해킹팀이 해킹당함으로써 드러났으나, 국정원이 RCS 외에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혹은 구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없음.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14.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사건

1) 조사결과 요지¹⁷

①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 2010년 1월부터 청와대(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기획관리비서관실)로부터 명진스님 관련 동향 보고와 견제활동을 요청받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스님에 대한 견제활동을 지시함.
- 국정원 담당부서는 명진스님 관련 동향과 정보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례 보고하였으며, 심리전단은 2010년 3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이버상에서 명진스님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규탄시위 등을 전개함.
- 다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나 명진스님 주지직 퇴출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미확인됨.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원세훈 전 원장뿐만 아니라, 명진스님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심리전 전개를 국정원에 요청한 청와대 관계자들(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함. 2010년 1월경 민정수석비서관은 권재진(2011년 8월까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동관(2010년 7월까지), 기획관리비서관은 정인철(2010년 7월까지)이었음.

¹⁷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6.

15.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

1) 조사결과 요지¹⁸

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 전개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09년 6월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논리 개발·활용계획>,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보고, 2011년 5월 <노무현 死去 2년 계기 중복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보고함.
- 2011년 2월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대북 협력 정책을 중복행위로 규정하여 심리전을 전개하고, 2010년 9월 박지원 국회의원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 러시아 방문 외교 비판을 국정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심리전 전개함. 2011년 8~9월에는 박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방하는 심리전을,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를 '좌파교수'로 규정하여 퇴출·매장 여론 조성을 위한 심리전 전개함.
- 그 외에도 2011년 1월에 홍준표, 정두언, 안상수, 원희룡, 권영세,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최문순, 김진애, 유시민 등을 대통령 모독 또는 국정음해 등의 사유로 트위터 등을 통해 비방하는 활동을 전개함.

②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오프라인 심리전 전개

- 보수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대표 변희재)>를 활용하기 위해, 2009년 2월 창간 직후부터 기업체 및 정부기관 등에 <미디어워치> 정기구독 및 광고지원을 요청한 결과, 전경련과 삼성등 26개 민간기업과 한국전력 등 10개 공공기관이 2009년 4월~2013년 2월 사이에 4억여 원 가량 광고비를 지원받음. 반면에 변희재 대표에게 국정현안 관련 우호적 기사 및 좌성향 인물과 특정정치인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토록 요청하여 실제 보도되었음.
- 국정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0년 11월~12월 사이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 등의 명의로 조선, 중앙, 동아, 국민, 문화일보 등 5개 신문사에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김대중 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총 5,6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단체 명의를 활용한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광고비를 지원함.
- 주요 인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2009년 6월 <자유민주수호연합>이 이상돈 교수 비판 기자회견을, 2011년 8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박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비판 집회 등을, 2011년 11월 <자유대한수호실천본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1인 시위를 열게 하는 등, 보수단체를 동원하였음.

③ 정치인 대상 현안대응 심리전 관련 청와대 지시 유무

¹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09.25.

- 청와대(민정, 홍보, 기획관리비서관)에서 정치인들의 인물세평이나 동향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비방지시 사실은 확인되지 못했음.
- 다만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야권 및 특정 정치인 관련 대응활동을 수시로 지시하였음.

▶ 조치사항

- 원세훈 전 원장 등을 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보수단체들에게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실행하게 하면서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한 내역도 밝혀져야 함.
- 보수단체 명의를 활용한 신문광고의 경우 조사결과에서는 5건만이 공개되었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일간지 등에 보수단체 명의로 광고를 게재한 사례들 전체를 조사하고 공개해야 함.
- 미디어워치 외에도 심리전 전개를 위해 보수 및 극우 인터넷매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미디어워치 외 국정원이 활용한 인터넷매체가 더 없었는지도 밝혀야 함.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전 전개내역에도 있듯이 대학교수 및 평론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칼럼 게재도 심리전의 주요 수단임이 분명한만큼, 국정원의 기획 또는 요청으로 게재된 칼럼들도 조사되어야 하고 필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적 댓가가 있는지도 규명되어야 함.

1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 의혹

1) 조사결과 요지¹⁹

- 2010년 3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자유주의진보연합>으로 하여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함.
- 이후 국정원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편지를 작성해,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서한 <Regarding the ex-President Kim Dae-Jung's Nobel Peace Prize>와 관련 서적 1권을 2010년 3월 9일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최진학) 명의로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함.
-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영문서한 번역 및 발송비 250만원 및 책자 구입비 50만원 등 300만원을 예산에서 지출함.

▶ 조치사항

-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노벨평화상 취소 운동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진보연합 외 다른 보수단체 지원 및 활동 동원사항 여부

¹⁹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0.16.

17.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문건 의혹사건

1) 조사결과 요지²⁰

- 2010년 6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정인철)의 요청을 받은 후,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문제성 선거공약'을 점검 후 대응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함.
- 2010년 6월, 여당과 정부, 보수언론 및 보수단체들이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에 대한 견제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거쳐 청와대(정무수석-정진석 및 민정수석-권재진) 및 국무총리실(당시 정운찬)에 배포함.
- 2010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홍상표)의 요청으로 야권 지자체장과 달리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사례 조사하여 청와대에 보고함.
- 2011년 8월 25일 원세훈 당시 원장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지자체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국정원의 담당부서에서는 9월 15일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제하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과 차장 등 지휘부 보고 후 청와대(대통령실장(임태희) 및 정무수석실(김효재), 민정수석실(정진영))에 배포함.
-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를 위해, 2010년 11월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들로 하여금 김두관, 안희정 지사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규탄집회, 비판광고 게재 등을 실행토록 하거나 그런 정황이 있음.

▶ 조치사항

- 이미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중에 있으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권고함(국정원개혁위)

2) 한계와 과제

- 국내정보부서가 2010년 11월 ~ 2011년 4월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를 활용 또는 동원하여 야권 지자체장(김두관, 안희정, 송영길 등) 비판 집회, 광고, 국민소환운동, 항의서한 발송 등을 실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규명되어야 함.
- 2010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동향 수시 보고와 보수단체를 활용한 견제활동이 2010~2011년 사이에만 있었고, 2011년 이후 특히 2012년에는 없었는지 확인되어야 함.

²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7.11.0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자료집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발행일 2017. 12. 26

발행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참여연대 김호선 간사 02-723-5302 tsc@pspd.org